

#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78 회

제 2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 가. 김학원 의원
  - 나. 박희진 의원

##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 2면
- 1. 시정질문의 건 ..... 2면
  - 가. 김학원 의원(일괄질문) ..... 3면
  - 나.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 9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 16면
- 보충질문(박희진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 30면

(10시 10분 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본 의장이 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례회를 대비해서 예결특위를 재구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 의장에게 사의표명한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내일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명단은 송재용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오영세 의원님, 양승근 의원님.

사의표명을 했는데, 오늘 정례회가 끝나고 의원들님과 협의해서 재보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10시 11분)

○議長 金南勛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박희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부의되어 있으며,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 지원 결의안,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동의안 등 4건을 부의하여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南勛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10시 14분)

○議長 金南勛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두 분의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학원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순서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은 20분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관례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그 후 3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김학원 의원(일괄질문)

(10시 16분)

○議長 金南勛 그러면 먼저 김학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서구 제3선거구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한파는 시민들의 온정마저 뒹뒹 올려 버렸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재정보전 및 재원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저성장·고물가의 덫, 성장동력 쇠퇴의 덫, 저출산·고령화의 덫,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분열의 덫을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감세로 초래된 재정상황 악화라는 이중, 삼중의 덫을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대전시 자체수입원인 소득할 주민세 감소를 초래하고, 내국세수와 연동하여 이전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내년에 대전시의 이전재원 감소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감소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계획 및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또한 국책사업유치를 통한 국비확보 등과는 별도로 대전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가칭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가칭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은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원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과 편익의 원칙과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견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확대로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원의 약 70% 정도가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 부칙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만 보통교부세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로 환원해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규정대로 대전시가 보통교부세로 재원을 확보한다면 지방이양사업 중 복지수요가 많은 노인시설·장애인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특정수요 항목으로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시장의 복지사업비로 활용할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재정지원 감소로 야기되는 민원이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2010년 이후의 복지수요에 대한 중앙부처 내의 이러한 논의들 중 어떤 방안이 우리 시의 복지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통합·융합을 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침 개정과 함께 발표된 ‘대덕특구 활성화 전략’은 종래의 하드웨어적 활성화 전략에서 특구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그램 가동으로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학기술의 상용화만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 또는 통섭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소, 벤처기업 등 고급 과학기술인력만 해도 약 2만여 명 가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력 규모도 350여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산업에 종사하는 핵심계층의 인구분포도를 조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는 19명, 서울시의 21.7명 다음으로 창조계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광주시나 부산시, 대구시는 4 내지 6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를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 창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은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체육의 융합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축각을 곤두세우고 유치하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신산업 창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시 차원에서 이미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소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육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을 통한 산업화 단계는 아직까지 시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대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대전에 애착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과학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과학기술과 체육의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미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그 일정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인력들 간에 소통 및 교류의 장을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들 상호간에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우주탐험관, 인간과 과학관, 재생조형관 등 미활용공간을 과학계의 전문인력들과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체육인,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배출가스저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 시범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열섬화 완화, 녹지율 증가를 목표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시민공원 조성 등 ‘행복한 대전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반 확충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전 건설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분에서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이르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이나 연료소비의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책마련의 시급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

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시민단체의 최근 3년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 시내 교차로와 학교 및 주택가 등 총 111곳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11곳에서 이산화질소(NO2) 배출량이 국가기준치(60ppb)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신호대기 차량들의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 배출 및 미세 먼지로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공회전 억제로 인한 연료절약 효과는 6초 이상만 정차한 후 다시 시동을 걸어 출발하여도 경제성이 있으며, 자동차 1대당 연간 약 83ℓ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1,7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연간 14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교차로 대기차량들에 대한 ‘교차로 정지시 시동끄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를 시행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 또는 대덕연구단지 내 모 연구소에서 개발한 PS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국악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전통문화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서는데 반해, 대전시는 지나칠 만큼 서양음악 중심의 시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의 열악한 시설과 재정형편 그리고 인력분야를 포함한 연정국악연주단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는 지금의 명칭을 과거처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복원시키고, 국악운동의 효시였던 대전의 역사성을 되찾아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용국악원인 대전국악당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건축한 지 30년이나 되는 노후된 건물로 국악연주단의 정상적인 공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종전대로 다목적 회관의 기능을 살

려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정상적인 연주활동을 위해 대전 국악당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1년에 정원이 동결된 이후, 단 한 명의 상임단원 증원 없이 65명의 상임단원들이 2007년도에 163회, 2008년 11월 현재 123회 공연을 소화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이웃 전라북도립국악연주단의 정원은 무려 135명이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연정국악연주단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전시가 국악대중화운동 선두주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 대전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선보일 전통음악을 소재로 첨단산업과 연계된 국악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주제로 하천연구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서류분실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요 관심영역 중 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후 5시 19분에 대전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중앙데파트’를 철거하였고, 내년 6월 안에 ‘홍명상가’ 마저 철거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소문이나 언론에서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소유권 귀속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확인하고자 당시 건축허가서와 기부채납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행방에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은 이렇습니다.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면 대전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또한 기부채납 관련 계약서의 소재파악 등을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등 해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정황상 무료사용 기간을 끝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이 자명하다”며 “업무과실로 생긴 손해를 두루뭇실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등의 혈세 보상 논란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중에는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1973년 3월 26일자 ‘대전시 도시 432호’로 표기된 문건이 발견됐음을 적시하면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분실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축물이 대전시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관련 문서가 발견돼 향후 건축물 보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



망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문건이 건축물에 대한 법적 보상 명분과 서류분실에 따른 의혹 해소 등의 단초는 제공했지만, 아직도 각종 의혹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시장께서는 비록 철거대상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로 보상비를 충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시민 공동의 관심 사안이며 각종 의혹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성호 시장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이란 결국 시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다 윤택하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시장이 보여준 독특한 리더십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소신과篤心 그리고 결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학원 의원 시정질문서

## 나.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10시 37분)

○議長 金南勛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한나라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지역 인재육성에 헌신을 다하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날로 증가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

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전은 자연과 환경이 더불어 함께 하는 ‘그린시티 대전’으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꿔 후손들을 위한 현존세대들의 자긍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의 환경문제를 진솔한 마음으로 풀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05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루 100여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 음폐수의 적정처리 불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계약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준공에 동의하였으며, 음폐수 처리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시공사 한화로부터 부과금 약 32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부당성 및 제반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수행 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의 음폐수 처리기준이 BOD 1만 ppm이하이나 현재 처리수는 약 2만 7,000ppm으로 1만 7,000ppm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페널티 부과에 있어 산정기준으로 손해배상전문가인 자문위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슬러지 처리비, 슬러지 매립비, 악취 저감비 등 주로 초과발생 슬러지 처리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초과 BOD 농도에 대한 처리비 산정을 제외하여 막대한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미처리된 음폐수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음폐수 초과 BOD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추정한 바로는 표와 같이 연간 7억 2,000만원, 시 인수 후 처리기간 12년 6개월을 포함하면 약 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한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음폐수의 처리계획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의 불가로 혐기성 추가용량 증설 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시공사 설계 시 유입 음폐수의 BOD를 2만 7,870ppm으로 예상하여 혐기성 소화조를 설계하였으나 실측 결과 설계보다 많은 13만~15만 ppm으로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서에서 산정한 실제 값보다 4.7~5.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실측치와 예상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평가한 기관이 있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대전시에 행·재정적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관련 부서에서 하였다면 응당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손해배상 사유 중 “성능보증에 미달되었지만 현재 시설물 운영에 문제가 없고, 다만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 인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 감사관실의 의견이라 하였는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중 음폐수 처리는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 7월 16일 시 감사관실은 재정산 공사비 환수 약 78억원을 결정하고도 시공사인 한화 측의 부당신청에 의해 2007년 10월 11일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의견을 철회하고 배상협상을 함으로써 수처리 및 기타 시설에 추가경비가 발생하여 막대한 시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재조사 의지와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천 유지용수 관련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통수식에 많은 주민과 함께 성대하게 치렀던 6월 13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천의 용수 및 수질 안정화를 위한 유지용량을 확보하여 1년 내내 수심 10~30cm를 유지하는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친수환경조성 및 하천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 1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용수 방류지점 수질오염 현황입니다.

물 위에 거품이 잔뜩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좀더 크게 보셨지요?

다음, 하천 유지용수 방류지점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물길 순환도입니다.

다음, 방류지점 수질오염 현황입니다.

바닥이 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다음, 취수부 전경입니다.

다음, 취수부 바닥이 아주 검게 썩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역시 오염물질이 묻쳐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물길이 흘러내리는 곳에 오염물질이 새까맣게 기름 덩어리처럼 묻쳐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지난 후 벌써 저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품이 심각하게 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운전 초기부터 유지용수의 악취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취수여울을 한밭대교 상류지역에 설치하여 1일 7만 5,000톤의 용량을 역펌핑하여 옥계교 부근에 방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수여울에 저류된 물은 장기간 저장됨에 따라 썩게되며 결국 이를 이용한 하천 유지용수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전천의 수질오염도는 대전천 도구 및 지류의 오염원 차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2급수 유지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급수 유지를 위해서 하천수질을 회식·개선시킬 수 있는 유지용수를 외부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대전천 상부지역 유지용수 BOD자료, 표에 의하면 대부분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기 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유입되는 수질오염의 문제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지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천정화식물 식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질오염의 문제는 상류지역의 유입수가 아니라 취수여울 내 저류된 저류수의 부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상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상류부 수질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또다시 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추진 당시에 취수여울에 저류된 물이 저류에 따른 수질오염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조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악취 등 수질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수여울에 저류된 저류수의 오염저감 처리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하천의 수환경 생태계보전을 위해서는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수질이 나빠지면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경험으로 확인된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3대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이 추진될수록 대전천 유지용수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여울 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질오염을 예측조차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하천유지용수사업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장은 환경, 수질전문가를 선임, 예측되는 수질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공사 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부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서남부 주거지역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1일 8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을 분석하여 160톤 처리규모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남부 지역에 계획대로 인구가 모두 입주한다 하더라도 하루 30톤을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 발생 생활폐기물 부족으로 주변 지역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되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도입예정인 금고동매립장에 MBT시설은 가연성 물질을 분리하여 소각발전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남부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원을 분산하여 운영비 및 기타 설치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남부 소각장 건설용역을 즉시 중지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향후 설치예정인 시설물 MBT에 통합 처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대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의 제반현상을 조사·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첨단환경기술을 개발·보급·전파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및 평가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 설립 이후 2008년까지 9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대략 1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본 의원이 그 연구결과와 활용성을 검토한 결과 특허, 학계논문, 대전시 관련공사 적용을 통한 원가절감, 관련조례 등에 활용된 실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검토 및 활용자료로만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자료로만 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14억원이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성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자체 발주과제의 경우 2008년까지 총 25개의 과제를 센터에 용역 발주하였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용역과제의 특성에 관계없는 다수의 인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용역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구결과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발주과제 수행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발주하는 과제는 실제 시정에 그 연구결과를 바로 적용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매우 고도화된 기술을 집약하여야 할 과제들로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역과제들이 대학 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발주과제에 대해서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존하지 말고

그 분야의 가장 적합한 책임자를 선정하여 보다 질 높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과제 선정방식으로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협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 의결기관인 행정협의회 위원들은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로서 정보의 독점성을 이용하여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감독해야 할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및 사후관리와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미흡 등으로 인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민의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악취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이야기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있습니까?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벌써 7년째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을 추구할 것입니까?

대전에 전문가가 없다면 타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국내 전문가가 여의치 않다면 외국의 훌륭한 기술자를 초빙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무용론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방안함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물 설치 시 기획 단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용역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적절한 기술과 필요한 용량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지역교수 및 기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 결정을 미리 용역사와 다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이 올바른 지적을 하게 되면 다음 위원 위촉 시 위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과 적절한 운영이 시급하다고

됩니다.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인근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공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수나 전문가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 또한 관련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설치 타당성 및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안은 다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해왔던 대전시 환경행정 현주소의 문제점 및 대안을 시장께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
-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

○議長 金南勛 박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議長 金南勛 그러면 김학원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 또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 처리에 애쓰신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잠시 금년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해가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매우 바쁘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한해였다는



자평을 해봅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예견되고 최근에도, 특히 경제위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관계가 노정 되고 있는 현안이 산적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힘과 지혜를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에 애써 와서 이제는 대덕R&D특구 1, 2단계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틀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72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 3,9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한 노력으로는 162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7,316명의 고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건설경기와 관련되어서도 최근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발주해야 될 2,400억원 규모의 신서남부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게 협의를 완료가 됨으로써 적어도 49%인 1,200억원 정도 이상이 지방업체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도 보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환경과 관련되어서 3대 하천 살리기, 나무심기,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는 활발하게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관련한 사안들도 많은 협의와 노력을 거쳐서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지원과 지혜를 보내주신 점에 감사 드리고, 최종적으로 민원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장 합리적인 버스운영시스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지원에서도 어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영재학교를 유치하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적극적인 그런 후원과 격려가 우리 지역에 영재학교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학교를 지역사회 중심센터로 만들자는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썼고 현재도 학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간의 노력들에 다소 힘입어서 나름대로는 우리 시에서 상당한 외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제1회 해피코리아 행복 한도시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무지개프로젝트가 자치경영 대전 최우수시책으로 확정이 되어서 많은 도시들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거버넌스 리더십 금메달도 수상을 한 바가 있고, 특히 전국 장애인복지 인권 평가에서 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환경이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2008 한국의 아름다운도시 대상 친환경부문을 수상한 바도 있고 한국경제를 빛낸 경영인상에 환경경영대상 부문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제 자원봉사 1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노력과 활동들이 인식이 되어서 12월 5일 우리 시가 자원봉사의 도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대한민국 녹색대상자로 수상하게 되어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의회의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지도 또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점이라는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를 좀더 나은 도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서는 저희 지역에 대한 많은 걱정으로 재정문제와 전문인력을 통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문제, 차량 신호등과 관련된 잔여시간표시제 또 우리 연정국악원의 활성화 문제, 하천연구시설 기부채납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영향과 감소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험 및 소득세를 인하로 우리 시 본청의 경우에 재원 감소규모는 11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전국의 지방교부세 감소예정 규모는 4조 3,000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구에도 부동산교부세 등의 영향으로 145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감소재원 보전대책으로는 우선 보통분권교부세 신청 분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교부세 산정제도개선 등 노력으로 2008년도보다 증액하여 교부될 예상이 있는 바, 2008년도 내국세 추가징수 예정분이 한 8,000억원으로 감안할 때 100억원 정도 추가교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도 정부예산에 보전재원이 1조 8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지역 성격인 증액보조금으로 보전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봐가면서 지역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중앙재원 및 자체수입 증감현황을 보면 중앙재원에서 볼 때는 2007년도가 4,269억원인데 2008년도는 다소 늘어서 5,473억원 또 2009년도는 7,309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간 예상 추이를 볼 때에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율이 많이 떨어 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면서 좀더 아낄 것은 아끼고 필요한 데 더 잘 쓰는 그런 알뜰한 재정운용이 더 요구가 됩니다.

아울러서 중앙재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 에도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96.6%인데 이로써도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만 여기를 최소한도 0.5%라도 더 노력을 해서 46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세도 선납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00개 법인에 대해서 50억원을 더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노력을 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팀을 보강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도 12월 말까지는 52억원을 징수해왔습니다.

시는 118억원을 추가 징수한다는 목표를 두고 체납액 징수팀을 더 보강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정리를 촉구하고 또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도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세외수입

정수율 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계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건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신설해서 수도권외의 부동산 관련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으로 재배분 되는 재원으로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국세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를 비롯한 비수도권단체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지방세의 구조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과세가 거의 49% 대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지방세수 증가 및 자치단체의 재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은 한 62%가 소득세 소비과세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32% 수준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가 자명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로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자치경찰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인 것을 낮춰달라는 거지요.

6 대 4 정도로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지방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추이를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근본적인 지방 자체세원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근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김학원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부처별 동향까지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시·도가 연계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약 2,700억 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재원의 70%를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그 방안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복지재정에 가장 도움이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 및 분권교부세 증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2007년 분에 3,006억원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30.5%가 늘어나서 3,922억원입니다.

또 2009년에는 4,780억원이 되어서 한 22%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은 6.6%가 증가한 384억원이고, 2009년에는 2008년 대비해서 약 0.2%만 늘은 385억원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에는 우리 시 보통교부세 교부금이 2008년도의 경우 0.778%이므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분권교부세 산정 항목들이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으로 통합되므로 서울·경기 등 10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좀 상황이 유동적이거나 복합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권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시 최근 3년간 사회복지비 증가율이 22%에서 31% 수준입니다.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0.2%에서 6.6% 수준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관련 분권교부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융화 및 소통 환경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를 저도 해외를 출장하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1만원짜리 지폐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창조산업과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일들은 그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우리 도시가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적인 상황을 다 만드는 일입니다.

그 요소 중에는 중요한 것들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 교육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료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문화 이런 많은 것들이 도시적 행정에 요구되는 사안들이 점진적인 수준이 다 올라가야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국제학교도 의회에서 거들어 주셔서 이제 확장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을 통해서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영재학교설립 등에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런 여건들도 그 중요한 분들이 와서 자녀 교육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포럼을 다 조사해서 그 포럼 간에 네트워킹을 시도해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하는 포럼이 있다면 지원금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대학 관련된 종사자 인구가 인구의 10%입니다, 대학교수, 교직원, 학생의 수가.

저희 시를 비교해서 서울을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서울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서울은 대학 관련 종사자 수가 8.8%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도 10%가 넘습니다.

이런 모든 인프라나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창조계급들이 들어와서 창조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의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융합·통섭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학과 기술, 과학과 문화 아울러서 체육까지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를 삼아라!”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엑스포과학단지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콘텐츠산업을 일으키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CT대학원이 카이스트와 우리 주변에 있는 에트리연구소와 상당한 부분의 기술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이런 일들과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 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밖에 있는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 해외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우리 지역 밖에 있는 중요한 시설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의 창조산업이나 문화산업 또 의료산업 이런 것을 육성하는데 필요하다면 기꺼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토지를 용도 전환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유휴시설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

니다.

제제에 엑스포과학공원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존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육성을 위한 공간 배치를 별도로 해두면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산업이라든지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조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토지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교차로 정지 시에 시동끄기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감동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도시는 깨끗하고 참 좋은데 교통신호등이나 신호체계가 불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교통신호체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신호체제로 인한 불편이나 낭비요인을 없애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교차로 정지 시에 시동끄기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신호등 잔여시간표시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일부 큰 화물차가 중심 교차로를 지나갈 때 정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상 노란불이 있을 때에도 빨리 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김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차량신호등에 대한 잔여시간표시제는 아주 적절한 또 필요한 일로 보고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일본은 지금 삼각형 이런 것으로 보행로에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숫자로 인식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로 인식하는 것을 보행로에도 하고 지역 교차로에도 이와 같이 잔여시간표시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악원에 대한 국악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위 양악 부분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국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시민회관 성격과 우리 연정국악원의 성격을 함께 보태서 그것을 조정한 이름이 2005년 1월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이름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용홀 문제나 정원 또 기획안에 대한 예산 이런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 동향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한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극히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이를 더 보고 있으되 지금 가지고 있는 시립연정국악원 그 부분의 위치 내지 시설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재원만 넉넉하다면 별도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일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원과 그 시설의 개선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천시설물 관련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이나 시장이 되기 전부터도 간간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챙겨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나 법적으로 볼 때 옳다는 판단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없고 단지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만 준공 후에 시에 귀속하도록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73년도 문건서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건축 이외의 광로시설은 복개완료 후에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귀속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가건물 건축 이외의 광로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점용료 상쇄기간 산정 시에 투자공사비는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복개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볼 때 과거 일이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행위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갖다 추정해 볼 때에 아마 도로·공원 등 복개구조물의 귀속만을 의도했지 상가건물은 개인소유로 인정하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 서류는 아마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학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정부로부터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가 떠오르고 있고 또 우리 시도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와 녹색성장문제에 큰 관심과 지침을 가지시고 많은 제안과 지적을 해주신 점에 전반적으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하천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3,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문제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한 공기,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시공 현황은 이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 반복드리자면 2004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78억원을 들여서 100톤 규모의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하는 사항으로써 한화건설이 시공을 했고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감독한 그런 사무입니다.

과정에 따라서 적절치 못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취하가 되면서 32억원의 합의금을 본 것이 이 사항의 전말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미흡하거나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추계를 해보니까 받아야 될 금액이 훨씬 많은데 90억원이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그중에 약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은 초과 BOD 농도에 대한 처리비 산정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이 약품비의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액 중에 산정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지용수와 관련된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통수식을 하고 즐거운 마음에 가서 기쁨으로 통수식을 했습니다만 조금 지난 다음에 취수원이 있는 부분에서 부적절한 일들, 오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방장치들이 적절치 못해서 “물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지적을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현장에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도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루에 7만 5,000m<sup>3</sup>의 물을 상류로 돌려서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수원은 유등천에서 취수하는 것이 6만 5,000m<sup>3</sup>고, 대청호 원수 취수가 1만m<sup>3</sup>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 당시는 수량도 확보하면서 수질도 양호한 하천수 이용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갈수기 8월 4일과 8월 12일 채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디든지 수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조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소 알기에는 하천수의 수질은 주로 BOD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소수는 COD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적인 차이에 있어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측정한,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기준치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미달하는 것은 그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상태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더 맑은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참고해가면서 다시 한 번 유지용수 관리, 수질문제라든지 수량문제를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지 2급수 수질상태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고요,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시민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 부서장에 대한 환경직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과 관련돼서 하천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급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가 도시환경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배치에 좀더 신경을 써서

적절한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담당 사무관을 환경직으로 새롭게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소각능력은 처리용량이 1일 400톤이나 시설 노후로 인해서 약 260톤 정도 소각처리가 됩니다.

1호기 시설이 노후됐고 정기보수기간은 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60톤 정도가 소각처리 됩니다.

서남부지구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지상에 쓰레기통은 물론 청소차가 없는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송 쓰레기 소각처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연접한 열병합발전시설에 소각열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지역 난방에너지를 염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고, 2005년에 국무조정실에서 광역 소각로 설치를 권유한 바도 있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 소각로 설치를 완료하는 조건을 부여받아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구 서남부 소각장의 폐기물 전처리시설에 통합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용량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 2, 3단계 70톤짜리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는 70톤짜리 하나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기준치를 보면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연중에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균치는 있으되 몇 배 많이 나오는 때도 있고 덜 나오는 때가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1단계 1일 평균 발생량을 이게 공식이 있는데요, 일평균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연평균가동일수(300일) 분에 365일×1.3(월변동계수) 하면 시설 규모가 1일 평균 발생량은 63.3톤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70톤짜리 두 개를 산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1단계를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MBT와 통합처리에 대한 말씀을 제기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추진이 어려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가 있습니다.

MBT시설은 폐기물 전처리시설로 법적 의무적인 시설이 아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남부지역에 소각시설 미설치 시 타지역에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각시설 설치비용으로 현재는 법정시설이 아닌 MBT시설로 사용할 시에는 다소 집행상의 어려운 부분이 예기가 됩니다.

또 RDF전용보일러 설치가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돼서 일부 더 재정이 투자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따라서 2, 3단계 개발과정 추이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자동집하시설과 다소 상충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추후에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을, 법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주 요목요목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0년 12월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해서 산·학·연·행정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 센터장으로 충남대학교에 있는 환경공학과 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발주한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25가지입니다.

환경부 주관 장기 정기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한 센터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관계 그 25건의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4건이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타당성 및 폐기물 관련 업무개선사안이 6건이고, 자연환경분야 등 환경정책수립 관련 실태조사가 9건이고,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연구과제가 6건입니다.

특히 악취저감대책과 관련해서 1, 2산업단지는 2004년 대비해서는 한 54%가 저감됐다는 평가가 있고, 대덕산업단지는 2003년 대비해서 65%가 그래도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분야 연구과제는 센터에서 과제를 공모한 후에 적정 연구단을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전공자가 선임되도록 더 추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위원의 연구분야별로 전문가 한 100명으로 된 풀을 활용해서 매 평가 시마다 5인 내지 10인의 평가위원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위원은 선발에서 배제를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지난 제171회 의회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대로 연구과제 의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연구과제의 경우도 9월 의회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문제점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운영의 행태라든지 내용, 성과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안은 기획단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시행착오 없이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 보면서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은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비용도 크게 들고 우리 지역의 환경과도 매우 영향이 깊은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와 초기 기획단계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말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진행내용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런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바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센터 건이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南勛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까.

먼저 김학원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추가질문 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까.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답변내용과 본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정회를 요구합니까?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議長 金南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보충질문(박희진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議長 金南勛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까.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시장님께서 준비해서 발표해 주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아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한 본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한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음폐수 처리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말한 약품비용은 금고동 매립장 음식물자원 화시설에서 나오는 약품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약품비는 1만 7,000ppm이 오버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약품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지용수에서, 하천수에서 물이 고이면 그 자체가 호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댐 상류는 하천수로 보지만 대청댐은 바로 호소수입니다.

설령 하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한 BOD 결과 3급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재질문을 드립니다.

서남부권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그 법령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거나”라고 돼 있습니다.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항에 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각장 70톤이 부족했을 때 청정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전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차후에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議長 金南勛 박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市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면 우리 국장…….

○議長 金南勛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朴城孝 박희진 의원님께서 추가로 재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만하게 다 한몫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기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음폐수의 시공사 BOD 예측치와 실측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지적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계획 당시에는 음폐수에 대한 실측자료가 부족해서 검증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한화건설에서 의무 위탁시설 시 시설을 보완하는 등 폐수처리기준을 충족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산정하는 비용의 내용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과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있던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음폐수에 대한 추가 처리를 위한 약품비용을 산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하수들이 BOD 수준이나 COD 수준이 적정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그것만 할 때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은 그것을 BOD가 최소한 제로 이상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 필요하시면 양해하시면 저희 관련 국장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용수 부분에서 그 기준이 호소수냐 아니면 하천수냐 하는 논란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유지용수를 위해서 저희는 하천의 수질이 좋으면 좋겠다 하는 점으로 접수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질을 위해서 펌프장의 가동도 강우 당일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과 그 하루이틀 동안에는 퇴적물 부상에 따른 수질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해서 4~5mm 이상의 강우시에는 초기 우수처리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에 초기 우수처리시설 시범설치를 용문천 등에서 원류수 유출이 많은 다섯 개소에 먼저 추진을 하고, 하수도의 합류식 관거를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분류식 관거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과 더불어서 보와 관련된 주변에 어떤 시설을 개선할 사항도 있는지 여부를 챙겨서 그 수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안은 읽어주셨습시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든지 그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서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설치하는 것도 자체가 새로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것들이 염려가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그 내에다 설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옳다 하는 측면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70톤 규모로 설치를 해서 1단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치나 변동치를 고려할 때 63톤 정도가 1일 발생량으로 추정이 된다는 차원에서 70톤 규모로 한 개를 하고, 서남부 2, 3단계와 연계되면서 추가로 나중에 70톤을 하겠다 하는 구상인데 그 부분도 새로운 기술과 여건이 바뀌면 또 진행해가면서 그 부분에 적합하게 추후의 업무들을 추진해나갈 그런 공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勛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추가질문 더 있으십니까?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두 분 동료의원님과 답변해주신 박성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	오영세	양승근	김영관
전병배	김태훈	김재경	곽영교
김학원	조신형	오정섭	송재용
이상태	박희진	박수범	심준홍
이정희	김인식	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	박성호
정무부시장	김영관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자치행정국장	정하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
복지여성국장	신숙용
환경녹지국장	이상용
교통건설국장	김의수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소방본부장	박호선
공보관	윤태희
감사관	손성도
정책기획관	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	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教育廳)

부교육감	이원근
교육국장	강진수
기획관리국장	박종현